

# 광주군공항 부지 본격 개발 10년 후... 통합시장 후보 3인3색 청사진

국방부가 광주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역을 전남 무안군 망운면으로 지정하면서 사업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공항이 떠난 후 남게되는 부지(종전부지)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광주군공항 무안 완전 이전까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최장 10년 이상으로 예상됨에 따라 6·3지방선거 통합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3명의 예비후보들도 '광주형 실리콘밸리' '기후·환경 중심 미래도시 실증지' '첨단 신도시' 등 각자의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방부는 2일 광주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역으로 현재 무안국제공항이 들어서 있는 전남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지정했다.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은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의 첫번째 행정절차로 추후 '이전 후보지 선정 심의' '이전후보지 선정' '지원 계획 수립' '주민투표' '이전부지 선정' 과정 등이 남아있다.

군공항 이전 부지가 무안으로 최종 확

## 광주군공항, 상무지구 2.5배... 무안 완전 이전 후 개발 '실리콘밸리' '기후 중심 미래도시 실증' '첨단 신도시'

정된 후에는 '시행자'가 새 군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옛 광주 군공항 부지를 양여받아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기부 대 양여방식'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법적 규정이며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도 기존의 사업을 승계하도록 돼 있어 시행하는 기존 '광주시'에서 '전남광주특별시'로 변경돼 오는 7월1일 공식 출범 후 개발계획 수립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전지역 확정까지 1~2년, 착공부터 완공까지 8~10년이 지난 후 종전부지 개발이 가능하다.

이를 근거로 신정훈·민행배·김영록(국호 순)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상무지구 2.5배 크기의 광주군공항(8.2km<sup>2</sup>·248만평)을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며 표심

을 자극하고 있다.

신 후보는 "광주민간·군공항 이전은 무안지역이 서남권 관문공항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하며 기존 부지에 '광주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하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신 후보의 계획은 종전부지에 로봇,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첨단 모빌리티 기업이 집적된 '미래산업 캠퍼스'를 조성하고, 뉴욕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100만평 규모의 국가 정원을 넣어 문화관광 휴양복합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민 예비후보는 광주군공항 종전부지와 송정권 일대를 하나로 묶어 미래의 관문도시로 조성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공항 이전으로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송정권 일대 전반의 도시 재편이 가능해짐에 따라 영산강과 인접해 있는 종전부지를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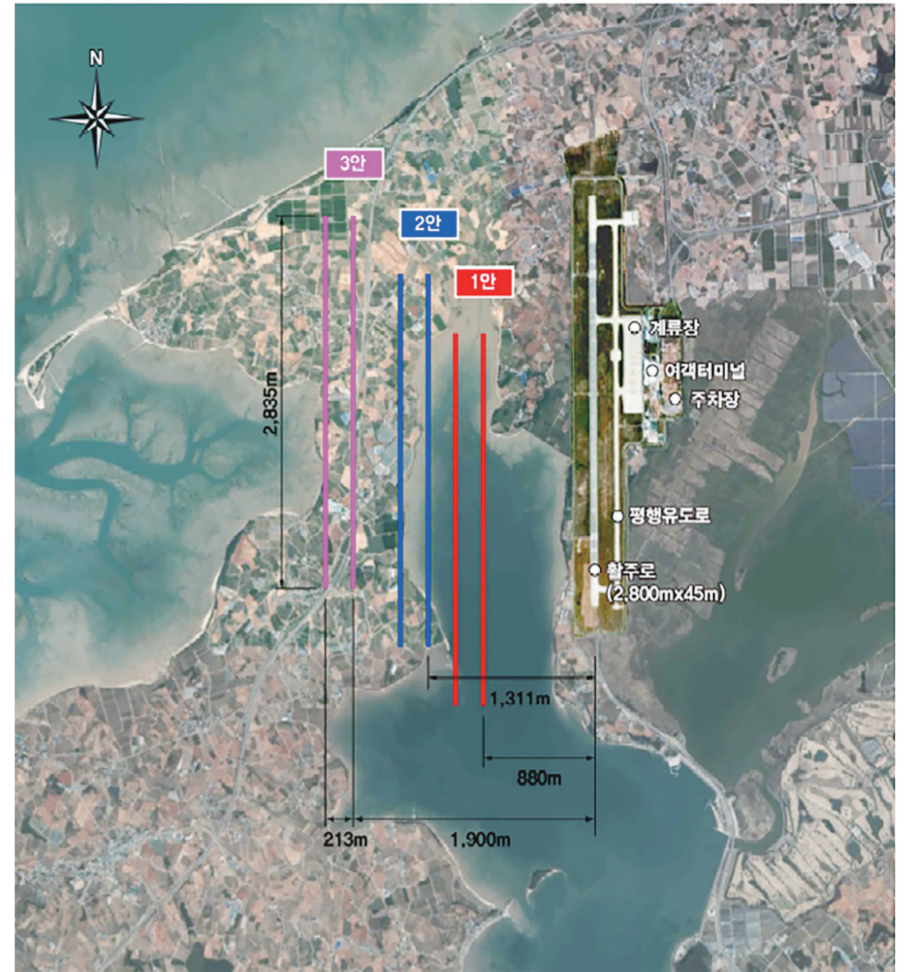
후·에너지·도시기술 실증 특구로 지정해 기후위기 대응형 저류공간과 친수공원·생태복원·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시티 기술이 결합된 미래도시 실험지로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

김 예비후보는 공항이전 부지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부산 센텀시티를 능가하는 첨단 신도시 첨단융복합산업 콤플렉스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부지에는 판교테크노밸리를 능가하는 첨단 신도시로 설계해 반도체 클러스터 헤드인 첨단 융복합산업 콤플렉스를 조성하고 컨벤션·호텔 관광시설까지 갖춰 AI 첨단 신기술 국제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되면 군공항 이전 사업이 본격 시작됐음을 의미하지만 완전이전까지는 8년에서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사업이다"며 "통합 특별시장 당선자의 계획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 청사진도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광수 기자

군공항 활주로 배치(안)



무안군공항 활주로 배치안.

사진=공항 소음대책토론회발제자료

## 광주 군공항 이전 본궤도... 예비후보지 발표 뒤 남은 절차는?

### 이전 후보지 선정 뒤 주변지역 지원 계획 수립

### 주민투표·유치신청 거쳐 최종 이전 후보지 결정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2일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발표 단계에 접어들면서 향후 후속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의 이날 발표는 군공항 이전 절차가 본격적인 부지 선정 국면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향후 이전 후보지 선정과 지원계획 수립, 주민투표, 최종 이전부지 선정, 신공항 건설 등의 절차가 차례로 이어진다. 국방부가 예비이전 후보지를 발표한

뒤 가장 먼저 진행할 절차는 이전 후보지 선정이다.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 이후에는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와 기준, 종전부지 활용 방안, 종전부지 매각을 통한 이전주변지역 지원 방안 등을 심의한다.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한다. 기재부·국토부 차관, 통

합특별시장, 이전지역 및 소음피해 예상지역 군수 등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다음 단계는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과 확정이다. 이 지원계획은 이전주변지역 지원 목표와 기본방향, 사업별 지원계획, 분야별·연도별 지원계획, 재원조달 방안 등을 담는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장 협의가 이뤄지며,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병행한다. 주민 수용성과 지역 지원 방안이 구체화하는 단계다.

지원계획을 마련하면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심의가 뒤따른다.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군·구 전체와 인근 시·군·구의 소음영향도 80웨클 이상 지역 등을 고려, 이전주변지역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후 국방부 장관은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한다. 선정계획은 이전 후보지,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이전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어지는 핵심 절차는 주민투표와 이전 유치 신청이다. 국방부 장관은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전 후보지 지자체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분히 반영해 국방부장관에게 이전 유치 신청을 할 수 있다. 주민 여론과 해당 지자체의 유치 의사가 최종 이전부지 선정의 중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끝으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 뒤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한다.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가 시작점이라면, 최종 이전부지 선정은 사실상 입지 결정의 종착점인 셈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올해 말까지 최종 이전부지 선정 단계까지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최종 부지가 정해지면 곧바로 사업 시행 단계로 넘어간다.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이전사업을 시행, 신공항 건설에 착수한다. 동시에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을 수립·심의하고, 시행 승인과 고시 절차를 거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광주 종전부지 개발사업도 병행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을 완료하는 데 1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남 기자

## 특별시 출범하면 광주 군공항 이전 조지 일원화... 행정효율 기대

## 판단·결정·속도·대의 대응력 향상 전망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앞두고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전남도와 광주시가 별도 행정체계 속 각기 판단하고 협의해 온 구조가 통합 이후 하나의 체계로 묶이게 되면서 사업 추진 속도와 행정 효율성

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일 시·도에 따르면 7월1일 행정통합을 앞두고 동일·유사 부서 간 업무 조정과 역할 정비를 위한 협의와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업무를 맡고 있는 전

남도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과 광주시 통합도시미래본부 역시 통합 이후 업무 연계와 추진 방향을 놓고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그동안 광주와 전남·무안 등 여러 행정주체가 얽혀 있었다. 시·도가 분리된 상태이다 보니 사업의 주요 국면마다 각 기관의 입장과 판단을 맞추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다. 같은 사안을 두고도 추진 시점이나 방

식, 전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 조율이 길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쟁점이 불거질 때마다 실무 협의와 정책적 조정에도 상당한 행정력을 투입해야 했다.

특히 판단의 기준이나 사업 전망이 서로 다른 지점에서는 협의가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안별로 해석의 차이가 생기고, 이를 조정하는 과정이 반복하면서 불필요한 시간 소모가 뒤따랐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소통의 간극이 오히려 불신으로 이어지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7월1일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상황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군공항 이전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가 사실상 하나의 행정체계 아래로 통합하면서 기존처럼 시·도 간 별도 협의를 거쳐야 했던 절차가 사실상 사라지는 것이다. 서로 다른 조직이 각자 판단한 뒤 조율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통합된 체계 안에서 보다 신속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행정 절차의 간소화는 물론 정책 메시지의 일관성 확보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군공항 이전은 여전히 복잡한 절차와 지역사회 설득 과제를 안고 있다"며 "통합 행정체계가 사업 추진의 속도와 효율성을 상당 부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경현 기자

### "여야 손잡고 나아가자"

당부한 **李**대통령  
국힘 의원과 악수도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전정 추천안' 시정연설을 마친 직후 국민의힘 의석으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적 위기 앞에 오직 나라를 위한 총정으로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가자"는 말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민의힘 의석 방향으로 본회의장을 나갔다.

이 대통령은 앞서 김재섭·김용태 의원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연설 도중 박수를 치지 않았으나, 연설 뒤에 이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자 악수를 나눴다. 주호영, 조경태, 박종권 의원 등과는 짧게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을 마친 뒤 국민의힘 의석을 바라보며 "각별히 감사드린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입장할 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이 대통령은 오후 2시10분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으며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이 대통령은 정청래 당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필두로 양측으로 도열한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발언대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황운하·김신민 조국 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 다른 정당 의원들과의 인사를 마지막으로 국회 본회의장을 나갔다. /뉴스시스

청산도에서 치유해 봄

청산도 슬로걸기 축제

2026. 4. 1. ~ 4. 30.  
슬로시티 청산도 일원

주최 | 완도군 주관 | 청산도슬로걸기축제추진위원회

2026 Pre 완도국제 해조류 박람회

기후리더, 해조류가 여는 바다미래

2026. 5. 2. SAT - 5. 7. THU  
완도군 해변공원 및 해양치유센터 일원